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4. 1.

방송통신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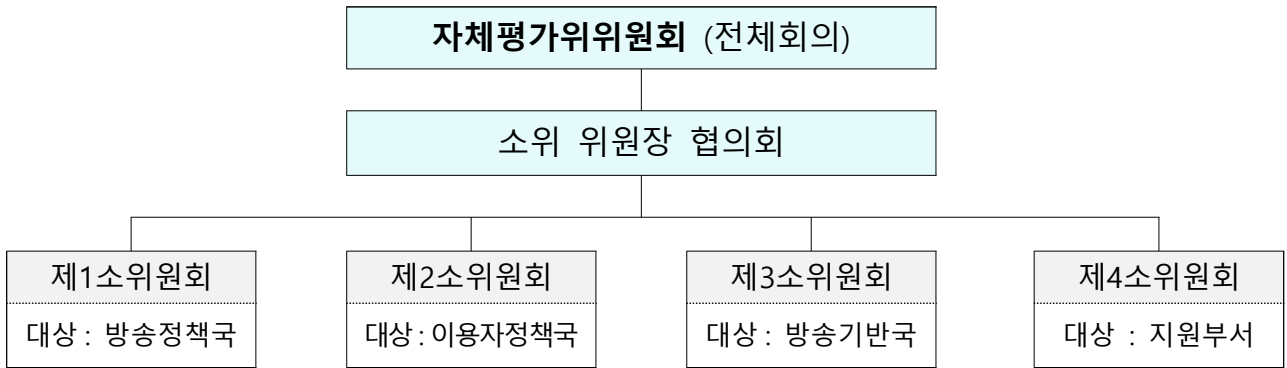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기준 반영) 국정과제, 주요정책 추진 등 변화된 정부 업무평가기준 반영
- (성과관리 강화) 정책부서 및 지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선정·관리하여 상위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환류 실효성 확보) 주요정책 관련 과제수행,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을 자체평가 시 가점 반영
 - 정책(환경)·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부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 운영 등에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조직(실·국) 단위별 소위원회를 조직, 소위원회별 정책추진 설명회 개최로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분야 3개 소위, 행정관리분야 1개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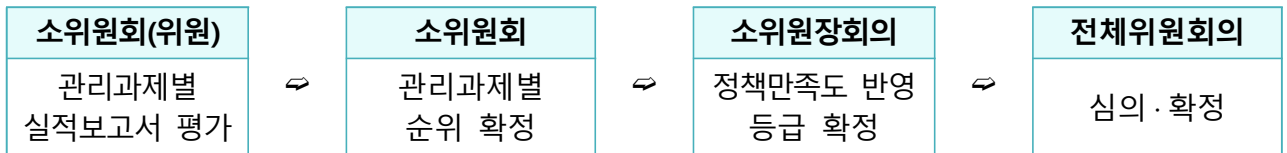
o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등

□ 평가방법

- o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정책·지원부서)별 평정 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 o 절차 : 정책부서(1·2·3소위)와 지원부서(4소위)를 나누어 평가하고, 소위원장 회의를 통해 평가등급 및 순위 조정

< 자체평가 절차 >



- (소위원회) 관리과제 추진부서로부터 추진실적 등 설명하도록 한 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별 '평가순위' 확정

- (소위원장 회의) 정책부서(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의 17개 과제에 정책만족도를 반영한 최종 '등급 및 순위' 확정

< 평가등급 범위 >

순위 누적	등급	정책부서(17개 과제)	지원부서(8개 과제)
~ 상위 5%이내	1등급 (매우 우수)	1개 과제	1개 과제
5%초과 ~ 20%이내	2등급 (우수)	3개 과제	1개 과제
20%초과 ~ 35%이내	3등급 (다소 우수)	2개 과제	1개 과제
35%초과 ~ 65%이내	4등급 (보통)	5개 과제	2개 과제
65%초과 ~ 80%이내	5등급 (다소 미흡)	3개 과제	1개 과제
80%초과 ~ 95%이내	6등급 (미흡)	2개 과제	1개 과제
95%초과 ~	7등급 (부진)	1개 과제	1개 과제

- (이의신청·확인절차) 자체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등급(안)을 담당과에 통보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 (전체회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확정

< 자체평가 추진일정 >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23.11.13.~11.16.	소위별 평가	과제수행 부서의 추진실적 설명 및 평가
'23.12.1	소위원장 회의	평가 순위 및 등급 결정
'23.12.29.	목표달성도 반영	12월말 기준
'24.1.17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의결
'24. 1월말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국무조정실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정책부서 17개, 지원부서 8개 등 총 25개 과제
- 평가지표 : 4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지원부서는 8개 평가지표) 구성

<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계획수립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 사례 조사 여부 및 전년도 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가 과제 전반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과정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 정책단계별로 정책고객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실적 및 정책반영 정도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상황변화(국회 / 언론지적 등)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극성	• 성과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정책실행 후 정책 만족도(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4개 항목	정책부서 9개 평가지표, 지원부서 8개 평가지표	
가점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1), 정부업무평가결과(+1),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1),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통합재정사업평가 포함)(+1)	

※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책부서에 한함

2. 평가결과

(1) 총 평

- '23년도 총 26개 과(팀)의 25개 관리과제(정책부서 17개, 지원부서 8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정책부서는 매우우수 1개(6%), 우수 3개(18%), 다소 우수 2개(11%), 보통 5개(29%), 다소 미흡 3개(18%), 미흡 2개(11%), 부진 1개(6%) 과제
 - 우수 이상 과제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인 것으로 평가
 - 지원부서는 매우우수 1개(12.5%), 우수 1개(12.5%), 다소 우수 1개(12.5%), 보통 2개(25%), 다소 미흡 1개(12.5%), 미흡 1개(12.5%), 부진 1개(12.5%)과제
 - 우수 이상 과제는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정가치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임

< 평정등급 분포기준 >

등급	정책부서(17개 과제)	지원부서(8개 과제)
1등급	1개 과제	1개 과제
2등급	3개 과제	1개 과제
3등급	2개 과제	1개 과제
4등급	5개 과제	2개 과제
5등급	3개 과제	1개 과제
6등급	2개 과제	1개 과제
7등급	1개 과제	1개 과제

- 총 25개 관리과제의 4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8.79%

-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계산
- 성과계획상 1개의 성과지표(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만족도)는 '24년 2월 중 산출 예정으로 달성률 산정에서 우선 제외

- 3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의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을 등)는 미달성
- 성과목표 미달성* 주요인은 방송통신 정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에 따른 적시 정책 추진 곤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중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는 97.5점 목표였으나, 69.7점을 달성하여 목표 대비 27.8점 미달

-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원회 구성 완료를 통해 주요정책 정상추진 및 목표달성 결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주요성과

- 정책부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등 4개 과제는 우수(1~2등급)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국립 해양조사원과 해양과학기지 등의 해안 관측용 CCTV 화면을 KBS 등 23개 방송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6월 ~ 10월)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국회 계류 중)
 - 재난 자막방송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방송사 자율 실시 유도
 - 코로나 19를 비롯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정규뉴스, 특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서 방송하도록 조치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사실조사로 EBS 등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행위로 인한 시청자 피해 예방

- TV조선-SKB간, 사회안전방송-HCN간 방송프로그램 송신료 관련 분쟁 조정 및 안 제시
- 유료방송 가입·변경·재약정 시 가입정보 문자고지를 전체 유료방송사(17개사)로 확대 적용
- 지상파·종편PP 등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현황 분석·공표 및 조치방안 마련(9. 28.)
-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및 해당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실시(8월~)
 - 결합상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시정조치,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유통점 교육 등 추진
 -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MSO로 확대 시행, 인터넷서비스 독점계약 건물 입주민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 감면 추진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애플 등 주요 앱마켓사업자 인앱결제 해지 절차 점검 및 앱내 해지기능 개선 권고(1월)
 - 배너광고 등을 통한 통신사 제휴 유료부가서비스 시정권고 및 가입·해지절차 개선(7월)
 -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모니터링 및 행정 지도 실시
 -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구제 손해배상 기준 확대(6→10배)하고 기준시간을 단축(3→2시간)하는 등 통신사 책임 강화 및 재발방지 유도
- 지원부서의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등 2개 과제는 우수(1~2등급)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마련으로 정보보호 수준 제고, 주요 방송사 보안관리 실태 점검으로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관리 강화 유도
 - 화재발생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전 직원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소방 전문가교육 실시
-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새로운 국정과제 수립 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점검 실시
 - 미디어 분야 선제적 규제 개혁,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 감축 등 이행
 - 불합리한 규제와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 정부혁신 추진
 -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갈등관리 과제(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발기금 지원기관 소관 불일치 해소 등) 선정 및 해소 노력

(3) 개선·보완 사항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3개 과제는 미흡(7등급)한 것으로 평가
 -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방안 마련” 등의 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
 -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및 자율개선 방안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음
 - 미흡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점검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 정책부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1등급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2등급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3등급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 기반 조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4등급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5등급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6등급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7등급

□ 지원부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1등급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2등급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3등급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4등급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5등급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6등급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7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I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정책부서)
---	--------------------------

□ 주요성과

○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및 면제) 국민의 수신료 납부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방송법 시행령, 7.12), 산불, 태풍, 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의결(4.25, 8.28)

○ (소유·겸영규제 개선) '08년 이후 국가경제 성장*, 미디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 소유제한 대기업 기준 상향, 방송사업자 겸영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 명목GDP : '08년 1,154조원 → '22년 2,162조원(약 87% 증가)

- 국조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 'GDP의 일정 비율'로 조정할 것을 협의 완료('23.10월)

※ 소유·겸영규제 개선 관련 국정과제 및 입법계획 일정은 '24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됨

○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개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 방송3법 개정안 국회의결(11.9) 후 대통령 재의요구로 부결(12.1).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기고, 보도자료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유·겸영규제 개선) '24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 수렴 및 개선 완료 노력 필요

○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강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효율성·객관성 제고 등을 아우르는 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 협약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KBS와 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통계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율, 소유·겸영규제 개선 추진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0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기간동안 모니터링, 민원분석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법안 및 정책을 마련, 국무회의 제안 설명, 산자부와 협업 통해 홍보 ■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합리적 규율체계 도입, 새로운 방송제도 설계, 소유·겸영 규제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5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 목표치를 달성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다양한 이해관계, 미디어 경쟁 심화, 기존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00	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디어 품질 제고 및 시청자 편익 증진 기반을 마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64		
계(93점)			91.64	
가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가치 성과
합계(00점)			93.64	

□ 주요성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 배움의 현장에 방문하여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유아 55개 기관, 청소년 403개교, 성인 42개 대학 연계)으로 교육 참여인원* 지속 확대
 - * 미디어교육 참여인원 : ('21년) 41.1만 명→('22년) 42만 명→('23년) 42.9만 명 예정
- (디지털 격차없는 평생교육) 디지털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 제공('23년 124개 기관)
- (미디어 인프라 확대) 센터 미설치 지역 주민의 미디어교육 접근권 제고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경남·대구) 및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 고도화
-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조사, 강사 양성·연수, 관련 연구 추진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미디어 참여행사 개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개최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9~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안 개발 등 미디어교육 체계화 노력 지속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00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미디어교육 현황 및 제언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와 이용자 만족도는 미디어교육의 질적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복합지표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8개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 미디어교육 교안 개발 시 교사 및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미디어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운영방안 수립 시 활용 ■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의 고도화 및 강좌 다양화 실시, 나눔버스를 추가 구축하는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교육 확대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노력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시청자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는 신규 지표이나,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도 시범조사 결과(5.8%)보다 3%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2.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00	2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체계화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 및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48		
계(93점)			82.48	
가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합계(00점)			84.48	

□ 주요성과

-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25개 방송사 48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36억원)
 - 전 국민 맞춤형 교육(유튜브 운영, 드론 활용 등 16회), 전문가 컨설팅(UHD 콘텐츠 촬영 및 편집 등 25회) 지원('23.11월 기준)
- (콘텐츠 유통체계 강화) 베트남 Telefilm(6.8.~6.10.), 싱가포르ATF(12.6.~12.8.) 콘텐츠 마켓 참가로 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 우수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위한 번역, 더빙, 자막, 재편집 등의 재제작 지원(12개사 20개 프로그램)
 - 지역방송사와 해외 방송사 간 콘텐츠 공동제작 및 유통 협력 등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11.8.)
-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부산MBC, 광주방송 등 7개사 13개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 및 OTT 플랫폼인 왓챠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지원
 - ※ 왓챠(97개), 웨이브(35개), 네이버TV(5개)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서비스 중
- (지역방송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를 담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마련('23.12월말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목표와 주요내용(추진실적)간 정책효과를 위한 상호관계가 모호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추진실적을 통해 정책추진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 지역·중소방송 대상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 '시청·청취자 만족도'와 '콘텐츠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등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생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2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함 ■ 사업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정책 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검토 등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함 ■ 콘텐츠 공동제작 협업추진, 지역방송 발전 협력체계 구축,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및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에 대한 목표치를 100% 달성함 ■ '시청·청취자 만족도'는 만족도 결과의 한계치 및 조사 대상 프로그램이 매년 변경되어 목표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전적으로 설정,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는 최근 3개년 마켓 출품 평균 증가량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2.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00	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유통활성화 지원, OTT 등 지역방송 시청기반 확대,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 협력 체계 기반 마련 등 지역방송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15		
계(93점)			75.15	
가점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00점)			78.15	

□ 주요성과

- **(재난방송 강화)** 산불,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요청('23년 현재 1,498건)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사업자(51개사)가 재난방송 약 35,000회 이상, 국민행동요령 2,207회 이상 송출하도록 조치
- **(기관장 재난방송 현장점검)** 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체계 및 제작·송출 준비 상황, 재난방송 주요 시설 및 시스템 관리·운영 실태 등 SBS 재난방송 대응상황 현장점검(위원장 직무대행, 7.21.)
- **(법규위반 행정처분)** '20~'21.2분기 중 재난방송 미실시·미흡* 등 법규 위반 방송사업자 30개사(89건) 대상 과태료 총 6억 6,750만원 부과
- **(재난방송 협력강화)**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재난방송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주관기관(기상청, 산림청 등)·방송사·방통위 간 협력체계 유지
-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법 등으로 분산된 재난방송 관련 규정 정비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재난방송지원특별법(안)」 마련 추진(~12월)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터널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실태조사(4,956개소), 기술지원(51개) 및 중계설비 지원(20개)을 통해 중단없는 재난방송 구현
- **(방송재난 대응)**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으로 방송재난과 방송서비스 피해 예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추진 계획 대비 추진일정의 충실한 이행 부족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재난방송관리의 직접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등에 따라 충실하게 계획 수립함 취약계층 재난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사 재교육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적절하다 판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8개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행안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노력 (가칭)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방송사(지상파·종편/보도PP) 및 전문가(6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 추진 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체계 및 제작·송출 준비 상황 등 방송사 재난방송 대응 기관장 점검 실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높으나, 목표 수료 인원에 미달 해빙기·하절기·동절기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달성 수어재난방송 확대를 수요를 대비하고,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상향지표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00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의 요청에 따라 재난방송의무사업자(51개사)가 재난 방송을 송출하도록 조치 완료하여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5		
계(100점)			82.25	
가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83.25	

□ 주요성과

- 엄격한 허가 심사 및 이행점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 (재허가 제도개선) 사업자별·매체별 차별화된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 서류제출 간소화, 조건부과 최소화 등 기준 및 절차 등 개선(23.6.월)
 - (허가조건 이행점검) 지상파방송사 대상 (재)허가조건 이행현황 점검 및 독려로 약 98.5%(526건 중 518건) 허가조건 이행을 달성
- 공영방송 역할 및 방송의 교육역량 강화 기여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K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무료 스트리밍 채널 확대(23.3월) 및 무료 OTT서비스(KBS+) 개시(23.9월)
 - EBS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이용 대상 확대(23.3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학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전환(23.7월)
- (AM라디오 기능조정 추진) 17개 AM 라디오 휴지(6개월) 실시 및 청취권 보호수단 확보 여부 등 확인 후 2차에 걸쳐 송출 중단 완료
 - ※ 폐지 : (1차 3.8) 부산 MBC 등 7개, (2차 5.8) MBC, SBS 등 10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당초 금년 1학기부터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협업 부처(교육부)의 예산 확보 등이 지연되어 무료화 개시 일정 일부 지연(7.17. 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시 보다 적극적인 협의 및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재허가 기본 계획 및 세부계획에 반영하는 등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현황은 '재허가 심사를 통해 평가받고, 공적책무 관련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동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표로서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전체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함(9개중 9개 완료) ■ 재허가 시 시청자 의견청취,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시청자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 ■ 중학프리미엄 무료전환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컨설팅 실시 ■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부관사항 부과 최소화 관련 외부지적에 따라 정책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검토 추진 ■ 중학프리미엄 무료전환 관련 사전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제휴업체와의 분쟁 및 위약금 등을 미연에 방지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2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제고율 99.25%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 ■ 방송사 경영여건 악화로 경영의 효율성과 공적책임 이행에 대한 균형 잡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00	2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심사 제도개선으로 심사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재허가 조건에 대한 정기적이고 엄격한 점검 등으로 방송사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유도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공영방송 역할 및 방송의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90		
계(93점)			83.90	
가점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00점)			86.90	

□ 주요성과

- (중편·보도채널 승인 실효성 제고) '23년도 승인 유효기간 만료 중편PP(TV조선·MBN)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 추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으로 조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조건을 미이행한 방송사에 시정명령 및 이행 촉구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재승인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 노력을 유도
- (공익채널 제도 개선) 공익채널 선정 사업자 현장 실사(방송사의 이행노력 및 애로사항 등 청취), 공익채널 제도 건의사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공익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요구사항, 기타 애로·건의사항 등 공익채널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개선) 유료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유료방송사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추진
 - 유료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간소화 방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 승인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종편·보도PP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 ■ 과제내용 및 목표에 부합하는 신규 성과지표를 발굴 및 적용,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구체적이고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에 적절히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추진계획 대비 8개 완료 ■ 재승인 관련, 방송사 이행실적 점검 시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단 운영 및 현장실사,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 ■ 공익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요구 사항, 기타 애로·건의사항 등 공익채널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 ■ 사전동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자 의견 청취 실시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허가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 ■ 재승인 관련, 콘텐츠 투자 실적 인정 범위 합리화 등 이행점검 기준 개선 등 노력 ■ 사전동의 관련, 행정기본법 신규 제정에 따라, 동법에 부합하도록 허가조건을 개선하는 방안 논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률(목표치 94%) 등 100% 달성 ■ 공익채널 사업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자문 100% 달성 ■ 사전동의 관련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 100% 달성 ■ (재승인 관련) 전년도 목표치(92%) 대비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치(94%)를 설정 ■ (공익채널 관련) 공익채널 운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목표치 설정(100%) ■ (사전동의) 과기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등을 위해 사전동의 처리율을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00	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상생환경 조성 등에 기여 ■ 양질의 콘텐츠 제작, 고용인력 증가로 시청자 권익증진 및 경영환경 개선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4.64		
계(100점)			92.64	
가점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95.64	

7.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 분쟁조정 활성화

1등급

□ 주요성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토록 제시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수립
- (포털뉴스 제도 개선) 포털사의 언론사 제휴평가 공정성 제고, 포털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지능정보 이용자 패널조사)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인식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포그래픽, 메타데이터 등의 형태로 공개하여 조사 결과 활용성 향상

통신분쟁조정

- (통신분쟁조정 제도개선) 조정위원 수 증원(10명→30명) 등 사업법 개정완료('23.1월 공포) 및 시행('23.7월)으로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 4G·5G·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주생활지에서 품질측정을 실시('22년 15회, '23년 23회)하는 등 현장밀착형 분쟁해결 업무추진
- ※ '23년도 방통위 정부혁신 콘서트 정부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선정('23.11월)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법조계, 통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가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위촉(현재 위원 10명, 임기 '23.8.21~'25.8.20)
 - '23.12.11일 현재 조정신청 1,171건 및 조정상담 9,188건을 처리해 최일선에서 통신관련 국민불편 해소

-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참고할 주요 조정 사례 제공, 유형별·지역별·사업자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제공 등('23.2월)
- (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조정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모든 통신분쟁 조정 절차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23.8월~)
- (통신품질측정 실시) 4G·5G·인터넷 등 품질 분쟁과 관련하여 신청인 주생활지(거주지, 직장 등) 통신품질 측정 실시 ('23.12월 현재 23회 실시)
- (해결률 제고)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매년 해결률 개선('19.6.~'20.12. 53% → '21.1.~12. 75.6% → '22.1.~12. 82.9% → '23.1.~11. 88.9%) 국민의 편익증진 기여
- (세미나 개최) 통신서비스 피해구제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실제 분쟁조정 시 적용하고,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제고 ('23.11.28)

온라인피해구제

-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강화) 온라인 상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상담·지원하는 원스톱 창구,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22.5월)
 - ※ '22년 5~12월 640건, 23.12.11 현재 1,714건의 피해상담 접수(누적 2,354건)
 - ※ '23년도 방통위 정부혁신 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23.11월)
-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2년 주요 피해상담 통계 및 실제사례 제공으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23.1.31)
-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상담센터 인지경로 파악, 상담 만족도 조사 기능,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피해상담 업무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추진
-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확충) 新유형 서비스 및 소관 불분명 피해 사례에 대해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를 강화하여 주요 피해사례 분석·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MOU확대 추진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논의해야할 과제를 선정하고, 의견 수렴·정책안 마련 등의 계획을 균형있게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분쟁 해결률을 지표로 설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완료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체, 민관협의회 등 이용자를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관계부처,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통신분쟁 및 온라인피해 민생점검) 통신 관련 주요 불편사항 점검, 온라인피해365 센터 센터 운영현황 점검 (방통위원장 '23.10월) ■ (대국민 참여형 슬로건 공모 시상식) 상담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국민참여형 슬로건 공모전 및 시상식 개최 (방통위 사무처장 주관 '23.10월) ■ (「통신분쟁제도의 사회적 역할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통분위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분쟁사건 분석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모색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분쟁조정 기관 통신사업자 과기부 등 100여명 참석 '23.11월) ■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3회, '23.3월, 8월, 11월) <p>*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p>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네이버의 제평위 투명성지적·운영 중단에 따라 제평위 운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망법개정안 마련 ■ 별도 연구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 발굴로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온라인피해구제 강화 및 통신분쟁 직권조정 확보방안 연구 ('23.6월~12월)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분쟁 누적해결률) 67.5% ('23.10월말 기준) ■ (온라인피해 상담건수) '23년 12월 기준 피해상담 건수는 1,714건으로 목표(1,207건) 대비 상향 달성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분쟁 해결률) 통신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분쟁조정 해결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매년 0.3%p씩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온라인피해 상담건수) '22년 7개월 간 접수된 상담건수 640건에 대하여 1년치 운영 예상치로 환산하여 10% 상향된 값(1,207건)을 목표로 산정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00	24.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메타버스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확립 유도 ■ 민관협의회(4회) 및 국제컨퍼런스(12.1)를 통해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정책 공감대 형성 ■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 실시 등 선제적으로 정책 의제 발굴 ■ 통신분쟁조정제도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운영으로 통신·온라인 서비스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대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0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23.12월), 조정신청 1,171건, 조정상담 9,188건 (23.12월) - 365센터 1,714건 피해상담 접수 (23.12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57		
계(93점)			95.57	
가점			1.00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96.57	

□ 주요성과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규제도입)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2.3.15 시행)에 따른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22.5.17.~8.4.) 및 사실조사('22.8.16.~'23.4.15.) 추진
-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점검 강화) 경품 제공 시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시정조치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점검 실시
-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원스톱 전환서비스 활성화, 불공정 행위 신고·사전예방 교육 등 자율규제체계 관리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마련
- (인터넷 플랫폼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 및 앱마켓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플랫폼 시장 실태조사·모니터링 추진 및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 미흡 및 보완·필요 사항

- 구글·애플측이 방통위가 통보한 인앱결제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당초 30일('23.10.6~'23.11.6.)에서 60일(~'23.12.6.)로 연장 요청
 - 한·미간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글·애플 측에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허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소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동향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파악 등 충실한 계획 수립 ■ 성과지표는 결합판매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행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법령 준수율로 반영하여 대표성 강화 ■ 계량화된 월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 기준과 수단 명확성 제고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연내에 모든 추진계획 완료 예정 ■ 앱 마켓사·앱 개발사 방문 및 면담, 결합상품 시장점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앱마켓 실태조사 조사항목, 내용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조정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 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구글·애플에 시정조치 안을 통보 (‘23.10.6.) ■ 네이버의 금지행위 위반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실시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5.00	3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를 달성 ■ 온라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찾아내어 목표치 상향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00	2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앱 마켓사 대상 금지행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증대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38		
계(93점)			91.38	
가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92.38	

□ 주요성과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유통망이 지급 가능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공정행위 점검 및 개선)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 조사 및 개선 활동 실시
- (신유형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 알뜰폰 사전승낙제 시행,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 개선 및 단말기 가격비교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편익을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알뜰폰 경품 가이드 라인 마련' 이 당초 계획(9월)보다 다소 지연 추진됨

※ 알뜰폰(휴대폰) 사업자 현황 : '23.9월 기준 56개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가이드 라인 및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유통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사실 조사, 제도개선 등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지원금 지급 수준 모니터링 실시 ■ 알뜰폰 사전승낙제 시행을 위해 알뜰폰 시장 분석 및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해외사례 검토 수행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상시적인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상시조사체계 운영 및 법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추진일정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해 1건 진행 중 ■ 알뜰폰 시장 경품의 범위, 경품의 한도 설정 방식 등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사업자 의견수렴, 경품 규제형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재부 관계부처 합동 '물가 관련 현안간담회'(10월)에 '단말기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안건 발표 등 적극 대응 ■ 민원 신고 유통점에 대한 적시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실시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4.00	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및 정책제도개선 및 상시조사 실시 건수 목표치 달성 완료 ■ 비대면 경제 확산 속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지표와 함께 단말기시장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 제도건수와 상시조사 실시건수를 지표에 반영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00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에 즉각 대응하여 건전한 유통시장 조성하는 한편,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고폰 유통 활성화 도모 및 데이터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호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12		
계(93점)			74.12	
가점			0.00	
합계(00점)			74.12	

□ 주요성과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의견·불만 처리업무 개선 등을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6.21.)하고 결과 공개(24.1월 예정)
- (통신장애 피해구제 강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10.5.)
- (맞춤형 이용자 교육)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진행,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10월기준 41,813명)
-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콘텐츠와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등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연중)
-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국조실·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이동통신 가입자 주의 문자 발송 및 요금고지서 안내(총 3회)
- (이용자 주간행사 실시)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도모 및 이용자 피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11.7.~9.)
- (선택재앱 삭제제한 행정지도)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삭제를 제한하는 보안 Wi-Fi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6.21.)
- (플로팅광고 행정지도)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총 350개사) 및 행정지도
- (어도비 사실조사) 어도비의 구독서비스 중도 해지시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22.8월~23.8월) 및 시정조치(안) 심의·의결(11.29.)
- (트위치 사실조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내 화질 저하, VOD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 저해에 대하여 사실조사(8.31.~)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중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를 위한 안내서 마련(6.2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분야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통·폐합 등 개선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 환경변화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적합한 계획수립 성과지표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을 반영 계량화된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 기준과 수단이 명확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모두 완료하여 계획을 준수함 피해예방교육 간담회(월 2~3회),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전문가, 시민 단체 등 의견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5.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은 18.5%로 목표치 달성 가능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 목표치를 '22년(18.0%) 대비 0.5% 상향한 18.5%로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00	2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및 데이터 소모량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통신비 절감 유도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48		
계(100점)			92.48	
가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93.48	

□ 주요성과

- (불법스팸 차단강화) 스팸, 피싱(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전화번호의 경우, 해당 이용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일체 정지 등 약관개정을 통한 통신사 책임강화(1월~)
 - 악성스팸(불법대출, 도박 등) 관련 문자 재판매사 집중점검 및 보이스 피싱 등 금전피해 유발 불법스팸 유통사업자에 대한 처분 강화
 - * 점검/행정처분의료: '21년 17개/12개 → '22.10월 31개/17개 → '23년 42개/28개
 - 스팸데이터 활용 협업을 통해 휴대전화로 유입되는 스팸문자를 단말기에서 필터링하는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 추진
 - ※ 필터링 서비스 개발을 위한 KISA-삼성전자 스팸대응 업무협약(MoU) 체결 등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위치정보 우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86개사) 실시,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 정기 점검(1,300여개사)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택시호출 등) 대상 수시점검 등 추진
- (본인확인제도 개선 및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신유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연계정보(CI) 일괄변환 제도화 추진('23.1.3. 법안 발의)
 -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신규 지정 추진(1~12월) 하고, 전체 본인확인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점검 추진(3~12월, 24개 기관)
- (디지털윤리 교육·인식제고 확산) 다양한 교육콘텐츠(30종)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전 국민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27.1만명) 실시
 -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참여기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제고(골든벨 퀴즈, 가족·청소년 캠프(5회), 직장인 교육(50회) 등)
 -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실시·홍보(공모전(6~10월), 디지털윤리대전(12.15.) 등)하여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윤리 인식제고 확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위치정보산업 성장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규제개선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위치정보법 전면 개정 필요
- 본인확인 수요 증가, 시장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 등을 고려, 이용자 편의성 및 본인확인기관 안정성 강화 방안 모색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였음 ■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표로 적절 ※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위치정보 사업 지원 만족도',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27개의 추진 사항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음 ■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기업, 학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교육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업을 위해 노력함 ■ 민생과 관련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을 운용하면서 스팸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해 나가는 등 적절히 대응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2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가능 ※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11.6통(잠정치)', '위치정보 사업 지원 만족도 91점(잠정치)',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90.1점(잠정치)' ■ 성과지표인 스팸수신, 위치정보, 인터넷 윤리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00	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팸 수신량이 감소하고 위치정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에 기여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28		
계(100점)			82.28	
가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83.28	

□ 주요성과

①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불법정보 신속대응) 자살 생중계·유명인사칭 불법유해광고 등 사회적 이슈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신속한 차단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 ▲ 10.29참사 2차 피해('23.1.12) ▲ 유명인사칭 불법광고('23.10.19) 등 7건
- (잊힐 권리 보장 협의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3월, 6월)

②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적발 및 삭제·접속차단 조치 (총 5,467건, '23년 9월 기준)
- (사이버 역기능 대응)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역기능 예방 증진대응

③ 가짜뉴스 대응 역량 강화

-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23.9월)
- (맞춤형 정보판별 교육)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추진(77회, 11월 기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 대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 효과가 미미함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신유형 불법유해정보 적기대응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불법 음란물 유통량 조사,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사전조사 등 통계분석 및 사전조사 충실히 수행 ■ 불법촬영물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뚜렷한 지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추진계획 추진 완료 ■ 팩트체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팩트체크 사업의 외부 평가에 대한 자문 실시 및 적극 반영(4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관계부처 협업(2회) ■ 마약, 도박, 자살, 내구제폰 등 불법유해 정보 대응 주요협의체 참여(13개¹) ■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의견 수렴 ■ 청소년 과의존 및 폭력 등 역기능 예방 증진대응 통합 앱 개발 보급 ■ 학교 및 가정에 보급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개발 ■ 관계기관(사업자, 방심위)과의 협력을 통한 10.29 참사 자살 생중계 등 불법정보 적극대응 ■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 탑재 앱 배포 ■ 가짜뉴스 신속통합 심의체계(패스트 트랙(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차단비율 목표대비 87% 달성(10월 기준, 16만 건 이상)(12월말 달성예정) ■ 팩트체크 교육 수수료율 91.2% 달성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76.6% 달성(12월말 달성예정) ■ 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의 성능 개선 지원을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목표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00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시행(90개)을 통한 성범죄물 확산 예방 ■ 청소년보호책임자 확대, 청소년보호 이행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보호SW개선보급 ■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17		
계(93점)			78.17	
가점			1.00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79.17	

□ 주요성과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상향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17~'22.6월 말까지, 관계자 징계 등의 중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 41개 채널을 대상으로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 여부를 조사, 총 4개 채널에 대해 과징금(방송법 제100조제3항) 총 6,900만 원을 부과(3.28, 7.19)
 - '20.7.1~'22.6월 말까지,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181건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출연자 조치(경고, 출연제한 등) 여부를 점검, 총 4건에 대해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11.30)
 - 방심위에 방송심의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방송사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700만 원 부과 처분('23.8.10)
 - '21회계연도 결산 국회에서 '방심위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 위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방심위에 부가('23.1월)
- ('23 방송대상 개최)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추세를 고려하여 시상부문을 OTT·웹·앱 콘텐츠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우크라이나 전쟁·항일 여성운동가 등 우수 프로그램 15편을 선정·시상('23.11월)
- (방송의 품격 제고 등)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18~22시)에 93개 채널을 통해 총 12,290회의 언어순화 자막을 고지(5월, 10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구체적 실행결과 및 성과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심위 성과 외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평가 및 기존 평가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음 ■ 방송품질 개선 노력, 심의활동, 민원 대응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체적 지표 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및 완료함 ■ 국민관심행사 고시 관련, 관계부처 및 방송사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함 ■ 최근 5년간 관계자 징계 등의 중한 제재조치를 받고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를 조사하여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00	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1월 말 집계 예정임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00	2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 시, 국민심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19		
계(93점)			81.19	
가점			0.00	
합계(00점)			81.19	

□ 주요성과

-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개선 및 보급 확대('22년 1.5만대 → '23년 2만대)
 -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되던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을 비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청격차 해소 및 방송시청 편의 제고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필수지정·고시의무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운영(59개사)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000여편)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48편) 제작·보급
- (VOD 서비스 지원)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을 확대(종편PP 2개사 추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 이용 편의성 제고
 - ※ ('22) KBS·MBC·SBS·EBS·JTBC·TV조선 → ('23) KBS·MBC·SBS·EBS·JTBC·TV조선·채널A·MBN
- (시각·청각장애인 지원기술 고도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실수요자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7~12월) 등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수어영상의 위치·크기 조정 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고(9개사)
 - ※ 채널(6개)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3개) : SKB·LG헬로비전·Skylife
-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장애인방송 관련 홍보영상 제작·보급,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개최(7~9월) 등 대국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OTT 등에 대한 미디어 접근성 보장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성과물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1개 추진계획 대비 100% 완료,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장애인단체·방송사업자·학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음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지원 방송사업자를 확대, 장애인의 온라인 미디어 접근 개선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목표치(95.0점) 100% 달성 ■ 수요자(시각·청각장애인)와 공급자(장애인 방송 제공 사업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 적극 추진하였음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20.00	2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55		
계(93점)			95.55	
가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96.55	

□ 주요성과

- (해지절차 개선)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한 이용자 대신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전체 유료방송사(18개사)로 확대 적용(3.23)
- (시청자 정보 부당 유행 제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정보 부당 유행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로 시청자 피해 예방
 -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위 시정조치 의결(22.11.16) 과정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어 173개 방송사업자의 보험관련 방송 모니터링(3~4월)
-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수급 및 대가 관련 분쟁 조정
 - 채널 편성 제외 관련 '시민방송-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간 분쟁 건에 대해 3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23.3.14) 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조정 및 합의 권고를 통해 분쟁 해결(연중)
- (이용자 보호 예고제 도입)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IPTV사업자의 단독상품 가입 거부 및 결합상품 강요여부 점검(6~9월) 및 결과보고(10.1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적정대가 산정 및 분쟁조정 필요
 - 방송시장 성장 정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콘텐츠 공급 대가, 채널편성 관련 이견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상황 파악 및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20년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으로 성과지표를 불공정행위 개선실적 건수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인식도로 선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3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협업 추진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한 이용자 대신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전체 유료방송사(18개사)로 확대 적용(3.23) ■ 방송시장 조사 정책 추진 시 외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만족도는 목표(71점) 대비 실적(71.3점) 100%달성 ■ 열악한 방송시장 환경속에서도 개선만족도를 최근 2개년 평균치(69.7%)를 기본으로 하되, 목표설정의 적극성을 반영하여 1.3%를 추가한 71%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20.00	2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분쟁조정 및 대가산정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이 적정 대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4		
계(93점)			90.24	
가점			0.00	
합계(00점)			90.24	

□ 주요성과

- (외주제작 실태조사) 방송사-외주사 간 계약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대상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상·하반기) 및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실시(7~12월, 문체부 공동)
 - 최근 3년간 표준계약서 활용,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및 활용, 상생 협의체 운영 실적 등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 점검결과 : ('20) 91.3점 → ('21) 95.7점 → ('22) 96.7점
- (제도개선) OTT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대·재편된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12월)
 - 오락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제도 등 방송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분과회의 및 연구반 각 3회 운영(3월~10월)
 - *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협회) 등 참여
- (OTT 지원)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 포럼 개최(11.16.) 및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12월)
 -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외 미디어 업계, 학계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개최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
- (공적채널 역할 제고 지원) 현행 일반PP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적채널에 대한 공적 역할 평가방안 마련(방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도개선 실적, OTT 정책의 실효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실시 ■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실효성을 진단, 주요 편성 이슈 발굴 결과를 편성규제 개선에 활용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6.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및 외주 실태조사 보고서 등 연내 정상 추진 ■ 외주제작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를 문체부와 공동 추진 ■ 오락·1개국 수입물·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개선 방향 관련 미디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청취(3회, 3~7월)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업계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23.4~12월) ■ 평가 대상·항목,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6.29) 및 사업자 의견수렴(10.30) 실시 ■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완화 관련, 외주제작사협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 논의(7월) ■ 초청연사 참석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글로벌 OTT 대표 강사 섭외 등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의 소통의 장 마련 ■ 현행 평가항목은 공적채널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위원, 전문가,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여 신규 항목 발굴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00	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85.6점으로 당초 목표(85.5점)의 100.1% 달성 ■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한 갈등에도 전년 대비 0.3점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00	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외주제작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기여 ■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방송의 편성자율권 확보 및 자유로운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전 국민 대상 양질의 공공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적채널의 공익적 역할 강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09		
계(93점)			76.09	
가점			1.00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77.09	

□ 주요성과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법령상 7가지만 허용하는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범주화하는 등 복잡하고 낡은 형식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추진('24.12월)

* 예외적인 금지사항 이외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광고를 허용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관련 사업자 등 간담회('23.6월, 9월)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10.25)을 통해 지원 대상사업자 범위, 지원규모, 산정방식 등을 마련 하여 방송의 지역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광고 균형발전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매년 지원사업 신청 증가 및 예산 증액*, 지원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사업효과 입증

* 직전 3년 평균 대비 예산 9% 증액(직전 3년 평균 34억원→'23년 37.2억원), 지원 기업 10% 증가(직전 3년 평균 204사 → '23년 224사)

※ 그간 성과입증을 통해 '24년은 금년 대비 예산 40% 증액(15억원 증액, '23년 37.2억원 →'24년 52.2억원) 및 지원기업 확대(97개사 증가, '23년 224사 → '24년 321사) 예정

- 중기부 주관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로 평가됨(우수·보통·개선필요 3등급 평가)

*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15개 부처 8개 분야 169개 사업 대상 평가

- 청년친화기업, 고용 우수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업자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 지원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지원기업 발굴하여 우선 선발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유도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견 및 사업효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적절히 수립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2개 지표로 구성한 것은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계획서상 11개 추진계획 대비 8개 완료, 3개 정상 추진 ■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사업설명회, 지원기업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제공,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홍보 협업, 홍보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게시 등 앞서가는 사업 추진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 추진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5.00	3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케팅 여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 ■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 설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을 통한 만족도 예측이 어려움에도 유사지표의 초기 목표치를 고려한 목표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00	2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을 통해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및 고용 증가, 청년 지원정책 반영 및 지역균형 발전 유도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36		
계(93점)			92.36	
가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00점)			94.36	

Ⅱ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지원부서)

□ 주요성과

- (국정과제 추진) 범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핵심 성과를 발굴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적극 관리

※ 방통위 국정과제 :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59.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와 소통 강화(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협조 및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

- (핵심 업무계획 수립)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주제의 2023 연두 업무계획 발표

※ 핵심 추진과제 : ①혁신 성장, ②미디어 책임성 제고, ③이용자 보호 강화, ④디지털미디어 규범

- (정부혁신 선도) 일하는 방식 개선, 형식주의 타파 등 기존 관행의 해소를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

- ‘2023년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정부혁신 콘서트’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전 직원 공유

* ①EBS 중학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②모바일 분쟁조정·통신품질측정 도입, ③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 (갈등관리 추진) 방통위 자체 갈등관리 과제*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갈등 해소에 주력

* 망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기관 소관기관 불일치 해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정과제를 반영한 주요정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의 지속적인 관리·점검 강화 (계속)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7.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혁신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신규·전입직원의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백서>를 마련하는 등 사례분석을 통해 계획수립·추진 ■ 방통위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 이행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과제의 성실한 추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적절 지표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계획한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전체 계획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 ■ 국정과제·방통위 업무계획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타부처 업무 협의 시 방통위 정책을 총괄하여 유기적인 협업 추진 ■ 유관부처·기관 및 방통위 내 부서 간의 정책 조율을 통해 범 부처 현안과 정책기조에 즉각 대응하였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8.00	3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와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체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방통위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의 지표임에도 100%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성과지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00		
정책효과성 (19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00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정책 추진 및 다양한 정부혁신 사례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국민권익 강화에 기여
계(93점)			91.00	
가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합계(100점)			92.00	

□ 주요성과

- (보안관리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으로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주요 방송사의 보안관리 실태 미비점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중요 정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관리 강화
- (수감기관 부담 완화) 보안감사와 방호실태 점검이 중복되는 방송 시설에 대한 통합감사(상·하반기, KBS 등 23개 방송사 및 송신소)로 수감기관의 부담 완화, 보안 및 방호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
- (비상대비 훈련 강화) 4월부터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한·미 연합 을지연습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기관장(부위원장) 중심의 을지연습 실시 및 실전과 같은 비상방송 제작 훈련 등 실시
- (재난대비 훈련 강화) 통합 연계 안전한국훈련(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의 동시 진행)을 통해, 소방·경찰·지자체·주요 방송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대규모 재난대비 방송분야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
 - 지진·화재 발생, 생명 구조 상황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소방 전문가교육(연간 3회)을 통해 방통위 전 직원의 재난대응역량 제고
- (정보보안 강화) '23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직원 정보보호 교육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업무혁신 노력 다소 미흡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성과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비상대비계획에 적절히 반영 ■ 최근 금융 부문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상기관을 기존 통신사, 신용평가사에서 은행까지 확대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이 담보된 측정지표를 성과 지표로 사용한 점은 적정하나 자체 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및 이를 통한 성과측정도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개의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동원 자원조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수립 등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으로 비상대비훈련 유공 국무총리 포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둠 ■ 소방·경찰·지자체·주요 방송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대비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함 ■ 지진·화재 발생, 생명 구조 상황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소방 전문가 교육을 통해 방통위 전 직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임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6.00	3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 98.7% 달성함 ■ 최근 정보보안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실적 대비 적극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1.2%p상향)를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00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7.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감사, 을지연습, 가짜뉴스 대응과 중대본 회의 상시지원 등 사회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함 	
계(100점)			85.00		
가점			0		
합계			85.0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규제혁신과제 추진) 투자·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해 발굴한 11건의 방통위 규제혁신과제 추진
 - 방송사 허가·승인제도 개선, AM라디오 기능조정,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등을 연내 추진하여
 - 방송·통신 사업자 부담 완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
- (신산업 활성화) 혁신적인 ICT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 신청을 수용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신산업 분야 활성화 촉진

구분	과제명	개선내용
임시 허가	행정·공공·민간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 등)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민간기관의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 (일몰규제 정비) 2023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사무 9건 중 2건 규제완화*, 1건 일몰해제**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 강화) 라디오에 '폭염', '한파', '건조' 재난방송 요청 시 재난발생 전 지역 → 광역시·도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선

- (통신사 대상 긴급중지명령 기준·유형 개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4조상 '번호 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문구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라는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 삭제 예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 재검토기한 중 이견이 없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균형잡힌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8.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기관의 규제혁신 방향을 적절히 수립 ■ 규제정비과제 이행률은 방통위의 규제 개선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과제이며, 기관 대내외적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7개 추진계획 대비 6개 완료, 1개 정상 추진 ■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몰규제 정비 시 전문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추진 ■ 외부기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개선권고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규제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5.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8.00	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 100% 달성 ■ 이해관계자와 다수부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추진 난이도가 높음에도 성과지표 목표치 100%로 유지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8.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2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고, 향후 신기술·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계(93점)			96.00	
가점			0	
합계(00점)			96.00	

□ 주요성과

-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하고, 주요정책의 이해도 향상 추진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교육 강화△아동학대 예방 △폭력예방(성희롱·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장애인식개선 △통일의식 △청렴 등

- (일·삶 균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연가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권장연가일수(15일)를 지정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및 독려

-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해 중소기업 및 장애인제품 등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

- (적극행정 활성화) 방송통신 분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총 20개 적극행정 과제* 선정

- 적극행정의 대·내외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5건을 선정

- 자체 경진대회 입상성적을 반영하여 우수공무원 12인 및 우수부서 1개 선발·포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직사회 세대교체 반영, 워라벨 제고, 국정가치 교육 및 적극행정 관련 가시적 실적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직사회 세대교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통계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정부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환류로서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가 우수 ■ 성과지표로서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등은 최근 정부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지표로서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6.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완료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내부직원 의견청취, 노사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노력이 인정됨 ■ 인사혁신처 등 유관부처의 정책변화와 공직환경 변화에 대한 잘 대응하였음 ■ 대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적인 직원 교육 등 대응이 잘 이루어졌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7.00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100% 달성 ■ 해당지표는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관행 등으로 실적 달성에 어려울 수 있으나, ■ 어려운 대내외 행정 환경에서도 일 잘 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8.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가치·국정철학 교육 및 직무 교육 등 건전한 공직관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일 잘 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에 기여
계(93점)			81.00	
가점			0	
합계			81.00	

□ 주요성과

-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미디어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OTT 등 신 유형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 미디어산업에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디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미디어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
-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글로벌 미디어 발전전략 논의,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조정을 담당하는 추진체계 마련 추진
 -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별 추진 정책을 포괄하여, 미디어 정책의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 및 미디어 정책 업무 수립·추진의 효율성·완결성 제고
-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우리 방송역사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여 방송 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방송 100년 역사를 재조명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기념사업 추진
-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가시적 정책추진 실적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국무조정실 소속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23.4.~)에 따라 OTT 제도화 방안, 방송규제개선 등 논의가 진행 중인 바,
 - 동 위원회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7.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및 해외 사례 등을 충실히 조사·분석하여 계획 수립 ■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 *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추진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00	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반 운영 및 국회, 연구기관 주최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 통합적 법체계·추진체계 마련 및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00	3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 미디어 경쟁 심화, 기존 제도의 한계, 신유형 미디어의 확산 등 복합적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패러다임 전환 및 방송 재도약의 계기 마련을 통해 미디어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계(93점)			87.00	
가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00점)			88.00	

□ 주요성과

- (주요정책 중점홍보) 기획 보도, 정책브리핑, 보도 자료 배포, 외신 보도 등을 통하여 방통위의 중점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 (기획보도) 범정부 5대 민생정책 중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과제 선정에 따라 기획 보도 추진(11.14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 (정책브리핑)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하여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관 소통 활성화
 - * 허위조작정보 정책 관련 방통위원장 백브리핑(9.6), 이용자정책국장 브리핑(9.11)
 - (외신 보도) 구글 인앱결제 관련 등 외신 관심이 높은 방통위 보도 자료를 영문 번역,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월스트리트저널(美, '23.10.6)등 주요 외신에서 다수 보도(36건)
- (오보 대응 체계화) 단통법 개정,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등 관련 기사 오보에 설명자료 배포 등 적극 대응하여 정책 신뢰도 제고(12건)
 - ※ 단통법 개정 관련 오보기사 수정('23.5월),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관련 오보에 설명자료 배포('23.10월), 방심위 심의 대상 관련 방통위 설명자료 배포('23.11월) 등
- (현장소통 활성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인 '통신 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10.19)
 - 이어 통신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절감 대책 등 논의(10.20), '온라인피해365센터' 정부광고 등 홍보* 강화 추진
 - * 전광판 국가광고 동영상 및 카드뉴스, 검색광고 등을 통하여 '365센터' 피해접수 방법 및 사례 등 안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통위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방송 출연, 언론브리핑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 활용 및 확대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8.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방통위 정책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3년 홍보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충실히 계획을 수립 ■ 객관적 평가지표인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대국민·대언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도 함께 설정하여 실질적인 홍보성과를 측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었음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 ■ TV수신료, 통신분쟁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하여 전광판 광고, 카드 뉴스 등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5.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8.00	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했던 성과 목표를 달성 ※ 정책홍보만족도 조사 실시 중(~12.13) ■ 언론소통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보도자료 배포건수' 지표를 "주간홍보 계획 사전배포 실적"으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8.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6)	2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인터뷰, 기고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대언론·대국민에 대한 방통위의 주요정책을 알리고, 각종 오보 등에 대하여 즉각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계			95.00	
가점			0	-
합계(00점)			95.00	-

□ 주요성과

- (주요정책의 체계적 소통 추진) 국정과제, 방통위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연간 디지털 소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월간 제작 스케줄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디지털 소통 추진
 - '23년 연두 업무계획 및 과·팀장 업무보고의 주요 정책에서 핵심 홍보 과제와 메시지를 선별, 종합적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 (스토리텔링 홍보로 공감유도) 방송통신 주요정책을 쉽게 이해·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의 콘텐츠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 캐릭터 '방통이'를 스토리텔러로 활용하여 '신중한 Enter!, 디지털폭력 Esc!' 캠페인 영상,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생활' 카드뉴스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위원회 내·외부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 내 정책 담당 부서 및 사업수행 기관, 정책 유관 부처 등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콘텐츠 제작의 내실화 및 확산 강화
 - 문체부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피해365센터' 캠페인 영상 ①민관 전광판 광고, ②범부처 매체협업, ③유튜브 콘텐츠 확산 진행
 - '온라인피해365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 지원 캠페인 영상 KTV 송출
- (쌍방향 소통 진행) 댓글 이벤트와 공모전을 통해 25천명이 넘는 국민이 방통위 주요정책에 직접 참여, 정책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등에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변화하고 있는 SNS매체 선호도에 따른 성과지표 수정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7.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연두업무계획, 과·팀장 업무 보고 등을 통한 핵심 홍보 과제와 메시지를 선별하는 등 종합적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 국민참여 콘텐츠 제작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소개하고 경험하는 콘텐츠 제작 독려 ■ 유튜브·페이스북의 구독자 수 등 정량적 지표를 성과 지표로 병행설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성과지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6.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변환기 등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총 14개 추진일정 달성 ■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메인 메시지 기획 ■ 문체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KTV TV광고, 민관 전광판광고, 범부처 매체협업을 통한 콘텐츠 확산 ■ 설명자료, 보도참고자료, 오보관련 정정보도 등에 대해서 카드뉴스 및 쇼츠 등을 온라인 콘텐츠 신속 제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8.00	3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초과 달성 ■ 국민 참여 콘텐츠 목표를 전전대비 10% 향상시킨 144건으로 선정 ■ 채널 경쟁이 심한 SNS환경 속에서 전년 대비 10% 향상하여 목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6)	16.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 캠페인 진행 후 배리어프리 콘텐츠와 관련된 언론보도 3배 이상 증가 ■ 댓글 등 이벤트를 통해 25천명의 국민들이 방통위 주요정책에 직접 참여
계(100점)			83.00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반영
합계(00점)			84.00	

□ 주요성과

- (국제협력 다각화) 태국 상무부, 스웨덴 국회 문화위원회,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등 정부 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 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APT) 면담,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등 방송통신 기관과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EU 디지털 협정, 한-UAE CEPA, 한-인도 CEPA, 한-GCC FTA 협상 참석 및 대응
- (이슈대응 강화) 한-AIBD 공동 워크숍(인도네시아, 5.20.~23.)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정부 간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의 통신규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정보 공유 및 논의
- (해외진출 지원) ‘지역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다: 아시아의 스토리를 세계와 공유하다’를 주제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9.21.)
 - 중국, 신남방(태국, 튀르키예), 북미(캐나다) 등과 방송/시청각 공동 제작협정 체결 지속 추진
 - ‘23년 제작 지원 3사(목포MBC, SBS, CJ E&M)선정, 제작 진행
- (남북교류 환경 조성)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남북 방송통신’을 주제로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 개최(11.1.),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북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송통신 분야 해외 진출 지원 및 주요 국제 행사·회의의 지속적인 참석 등을 통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8.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규제기관 조사 및 주요 정책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외협력 계획 수립 ■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안 마련 ■ 국제협력 업무 성과 측정을 위하여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와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의 합산을 통한 성과 지표 마련 ■ 남북 관련 3개 사업을 모두 지표에 포함하기 위해 각 항목 별 가중치를 부여한 통합 성과지표 마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0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00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 ■ 국제협력 관련 의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 남북 교추위(법정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방송관계자, 전문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의견 수렴 후 정책반영에 노력 ■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공동제작협정 제작 지원사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만족도 조사 실시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상무부, 스웨덴 국회 문화위원회,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및 정책 현안 공유 ■ 직접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 통일의식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00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00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8.00	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국제협력만족도와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목표 달성 ■ 정책고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 목표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8.00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 콘텐츠 활성화 및 창작의욕 등을 고취하였고, 공동제작 제작지원 지원사업자 수 매년 지속적 증가 ※ '21년 3개사→'22년 5개사→'23년 9개사 ■ 북한 방송통신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해 요약자료집,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여 활용성 및 국민들의 통일의식 제고
계(93점)			93.00	
가점			0	
합계(00점)			93.00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정책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관리의 직접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관리 사업의 정책성과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5.건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심위 성과 외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정(‘24년 상반기)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회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안)을 논의하겠음(‘24년 상반기)
9.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 효과가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 정보통신망 상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식약처), 도박(사감위) 등 관련법령 위반이 명확한 불법정보는 관계기관요청 시 방통위가 직접 시정요구 등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심의기간 단축)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하여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도입된 서면 심의(전자문서 포함) 대상을 주요 불법·유해정보까지 확대하도록 「방통위설치법」 개정 추진(‘24~, 계속) ○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확보) 글로벌 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정보가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직접 시정요구 등 관계법령 정비 추진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2.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정책 추진실적을 통해 정책 추진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24~'26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확대,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음
13.방송 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방송의 경쟁력 강화 및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등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24.12월) -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편성규제 개선관련 방송법 개정안 제출('24.12월)
17.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 위 개선	○ 단말기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제도 개선 활성화 필요	○ 단말기 유통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확대 및 유통시장 건전화 추진 - 대형 알뜰폰 사업자의 과다경품 등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4.6월) - 허위·과장광고 광고사례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23.3월)하고,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연중) - 판매점 사전승낙제 개선 및 이통사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통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24.6월) -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15%→30%)을 추진(연중)

□ 지원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 조직개편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주요 업무인 데이터 관련 업무의 성과지표 신규 발굴('24.4월)
7.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변화하고 있는 SNS매체 선호도에 따른 성과지표 수정 필요	○ 23년도 SNS 이용률*에 따르면 유튜브는 93%, 인스타그램은 39%, 페이스북은 31%로 유튜브는 그대로 유지하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변경 - '23.2~7월 13세 이상 한국인 대상 면접 조사, 한국갤럽
7.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사회 세대교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를 위해 그 간 각 분야별로 지표를 수립·실시하여 조직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향후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전제로 공직사회 세대교체를 반영하여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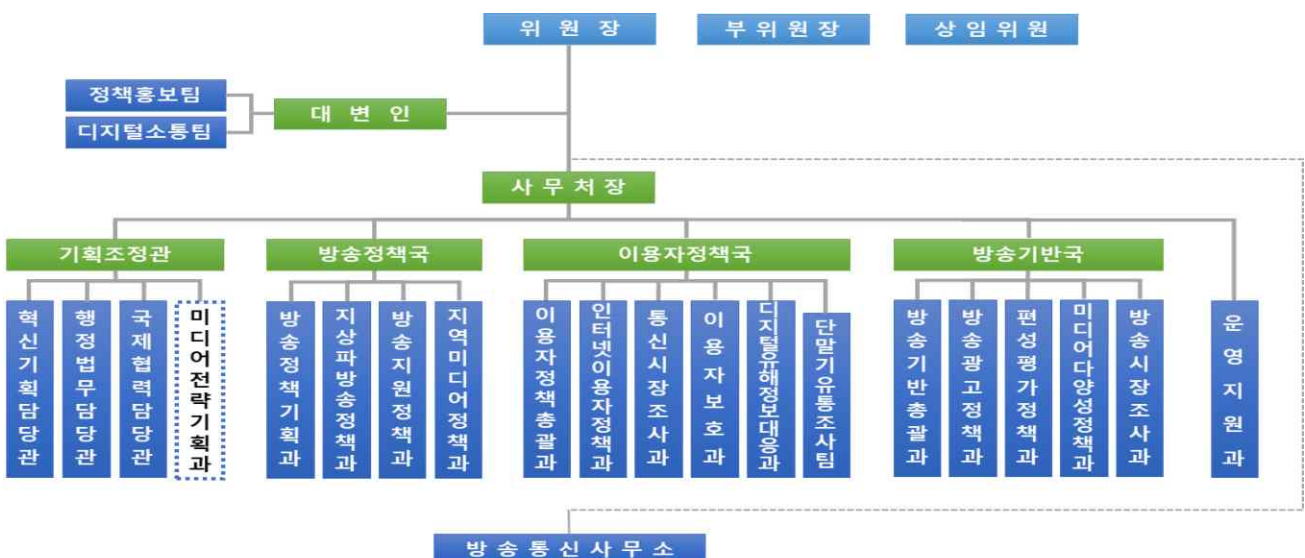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핵심기능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강화 ■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	---------------------

전략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	-----------------------------------	--	---

성과목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	-----------------------------	-----------------------------	---------------------

성과목표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	--------------------------	-----------------------	----------------------------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성과지표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건수 >

- 개념 : 방송법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및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를 합하여 산출
- 조사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대상 : 지상파, 종편·보도PP의 방송프로그램
- 조사방법 : 방송프로그램 방송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의 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처분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처분
- 측정산식 :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방송법 제4조제2항, 3항, 4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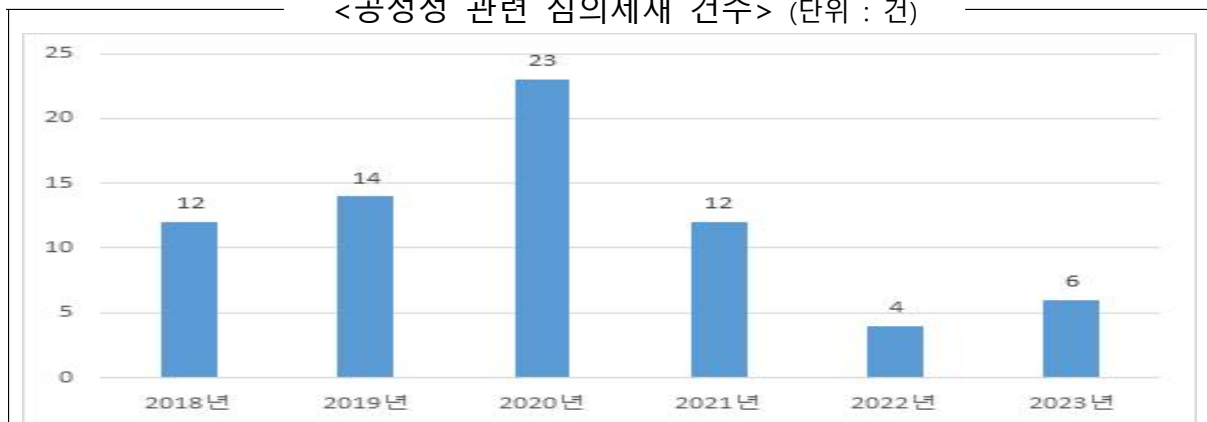
□ '23년 측정결과

○ 2023년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6건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음

- 지상파 6건, 종편PP 0건으로 '22년 4건에 비해 2건 증가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건수> (단위 : 건)



□ 성과분석

- '17년~'20년은 방송의 공정성 위반 건수가 증가했으나, '21년 대폭 감소하여 '23년 현재 감소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됨

※ '18년 12건, '19년 14건, '20년 23건, '21년 12건, '22년 4건, '23년 6건

< 방송의 공정성 관련 매체별 심의제재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주의	3	4	2	5	2		7	12		7	2		3	1	-	5		-
경고	1	1		1		1	1	1		3			-	-	-	-	-	-
관계자징계	1			2		1	2						-	-	-	1	-	-
과징금				2									-	-	-	-	-	-
소계	5	5	2	10	2	2	10	13		10	2		3	1	-	6	-	-
총계	12			14			23			12			4			6		

- 종편·보도PP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 종편·보도PP의 경우 '18년 7건에 불과했던 공정성 제재건수가 '20년 13건으로 늘어나 방송사 구성원들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21년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노력을 통해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건수가 대폭 감소('20년 13건 => '23년 0건*)

*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 방송의 자유와 독립, 건강한 미디어발전을 위한 방통위 조치 >

-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편성위원회 운영 정착
 - 지상파방송과 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 점검('20.9월)을 통해 노사 공동참여, 정기적 개최 등 편성위원회 운영 정상화

< 편성위원회 운영 관련 재허가 조건 >

- ①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KBS·MBC·지역MBC)
- ②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를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운영**(MBC·대전MBC)

- KBS 및 MBC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였으며, 방송3사는 편성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보도·편성 등 사내 현안 논의

< 편성규약 개정 주요내용 >

- **KBS**('19.10.22. 의결·'19.11.1 시행)
 - ① 국장 임명동의제, 방송총국별 지역 편성위원회 신설
 - ② 단체협약 실효 시 전체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등
- **MBC**('18.6월 개정)
 - ① 회사·종사자 각 5인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 ② 편성위원회 개최 규정 개선(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하에 미개최 가능,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회의 개최)
 - ③ 회의 결과를 사보와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지
 - ④ 편성위원회를 편성규약에 규정하여 단체협약과 분리(단체협약 실효시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 ⑤ 편성위원회를 통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자문 근거 마련

< 편성위원회 운영 횟수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KBS	4	10	9	7	3	2
MBC	0	0	2	2	3	2
SBS	1	2	1	2	1	1
합 계	5	13	12	11	7	5

- 종편 . 보도PP도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구성, 정기적 편성위원회 개최 등으로 제작 자율성 제고

방송사명	편성위원회 구성현황	편성위원회 개최실적
TV조선	총 12인(사측 6인, 실무자측 6인)	2017~2023년 : 매년 4회
JTBC	총 8인(사측 4명, 실무자측 4명)	2017~2023년 : 매년 4회
채널A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2017~2023년 : 매년 8회
MBN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2017~2020년 : 매년 4회 2021~2023년 : 매년 6회
연합뉴스TV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편성위원회 역할 수행	2017~2018년 : 매년 4회 / 2019년 : 7회 / 2020년 : 8회 / 2021년 : 4회 / 2022년 : 3회 / 2023년 : 4회
YTN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편성위원회 역할 수행	2017년 : 2회 / 2018년 : 0회 / 2019년 : 7회 / 2020년 : 4회 / 2021년 : 9회 / 2022년 : 3회 / 2023년 : 2회

■ 종편 재승인 조건 부가를 통한 불공정 방송 대폭 감소

- '17년 종편PP(TV조선, JTBC, 채널A, MBN) 재승인 심사('17.2월, 11월) 시 오보·막말·편파 관련 심의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
- 기존 22개('15), 17개('16)를 기록하던 제재건수가 4개('17, '19), 7개('18)로 대폭 감소
- '20년 종편PP 재승인 심사('20.4월, 11월)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준수',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
- '20년 13건에 달하던 심의 제재건수가 2개('21), 3개('22), 0개('23)로 급감
- '23년 종편PP 재승인 심사('23.4월, 11월) 시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 지속 부과

* 선거방송심의 위반 대상 건수 판단범위에 전국적 동시선거 외에 재·보궐 선거도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4년 ~ 2028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3	'24	'25	'26	'27	'28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6	17	12	12	15	12	'24년은 최근 5년 실적치의 평균값 (+2)에서 선거에 따른 공정성 제 재건수 증가를 감안(+3)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 '24년 목표치는 최근 5년('19 ~ '23년) 실적치의 평균(+2)인 12개에서 선거가 있어 공정성 제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3)하여 제재건수를 설정하였으며, 기타년도는 3개를 축소하여 12개로 설정

○ 전략목표 성과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나.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엄격하게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성 보장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제고 유도

■ 지상파방송사(12개사, 146개 방송국) 재허가 실시 ('24.12월)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MBC(3개, 부산, 대전, 경남), 지역민방(2개, 케이엔엔, 대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와이티엔DMB,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공동체라디오)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추진

- '24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보도PP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 추진

※ 종편·보도PP 유효기간 : 연합뉴스TV·YTN(~'24.3.31), 채널A(~'24.4.21)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실시 ('24.1 ~ 10월)

- **(지상파방송 부과 조건)**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지상파 UHD 정책 방안 준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실시 ('24.2 ~ 11월)

- **(종편PP 부과 조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준수,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 유지, 전문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성 진단 실시
- **(보도PP 부과 조건)**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 작성 후 방통위 제출

2.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

□ **성과지표 개요**

〈 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 〉

- **개념** : 통신·인터넷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한 이용자 보호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대상**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 **조사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 **측정산식** :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 상 제재건수 집계

□ **'23년 측정결과**

-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총 8건의 제재 처분

의결일자	대상	위반법령	제재사유	제재내역
'23.3.21.	7개사(배달 앱, 공유 모빌리티 앱 사업자 등)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사업 인가 의무 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 이용약관 관련 의무 등 위치 정보법 관련 의무 위반	○ 과징금 부과(7개사) : 13,038,560원 ○ 과태료 부과(6개사) : 총 1,350만원
'23.4.11.	판매점(30개)	단말기유통법	과다 지원금 지급	○ 시정명령(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태료 부과 : 총 11,040만원
'23.6.21.	삼성전자(주)	전기통신사업법	스마트폰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선택재하고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 삼성전자(주)에 대하여 보안 Wi-Fi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23.6.28	5개사(자녀안심 앱 사업자)	위치정보법	이용약관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등 위치정보법 위반	○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업 무처리 절차 개선 등) ○ 과태료 부과 : 총 1,650만원
'23.8.16.	12개사 (인터넷 신문사)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 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 인터넷 신문사(12개사) ○ 행정지도
'23.9.26.	대리점(5개) 및 판매점(21개)	단말기유통법	과다 지원금 지급	○ 시정명령(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태료 부과 : 총 12,900만원

'23.11.1.	10개사 (인터넷 신문사)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문사(10개사) ○ 행정지도
'23.11.29.	어도비(Adobe)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중요사항으로 미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 과징금 부과 : 1,309백만원




□ 성과분석

< 단말기유통법 상 제재처분 >

- (상시조사체계 구축) 유통현장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행위로 선량한 유통점이 피해를 입고 있어 '22년부터 「상시시장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적시에 단속(연중)
 - '성지점'의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판매점 과태료 부과 ('23.4월, 30개 11,040만원)
 - 민원신고 유통점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사실조사 실시 및 위반 유통점 과태료 부과('23.9월, 26개 유통점 12,900만원)

< 성지점 이란? >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 게시글을 올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유통점

		
▲ 네이버(카페)	▲ 카카오톡(채널)	▲ 뽀뽀(구입개통수령 포럼)

< 전기통신사업법 상 제재처분 >

-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어도비(Adobe)가 제공하는 '포토샵' 서비스의 이용계약 시 위약금 부과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를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실 인지 및 사실조사 실시('22.8.10.~'23.5.31.)
 -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총 13억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23.11.29.)

 -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점검결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위반 여부 모니터링
 -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및 교육 실시('23.8.17., '23.11.2.)
- ※ 점검대상 : 기 위반 사업자, 이용자수 상위 언론사 및 포털·쇼핑몰·커뮤니티 등 총 234개사
- (비필수 선택재앱 삭제제한행위 점검결과)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위반 여부 모니터링
 -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23.6.21.) 및 “보안 Wi-Fi” 1개 앱 삭제에 준하는 조치 완료

< 위치정보법 상 제재처분 >

- (앱 사업자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점검결과) 배달, 자녀안심 앱 등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배달, 공유 모빌리티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인가 의무, 이용약관 고지 의무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1개사, 약 1,300만원) 및 과태료(6개사, 총 1,650만원) 부과
 - 자녀안심 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및 제3자 정보제공 관련 개인위치 정보주체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5개사, 과태료 총 1,350만원)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점검·조사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통신 시장 투명성 제고
 -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상시 조사·제재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4년~2028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3	'24	'24	'25	'26	'27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2	5	6	7	7	7	과거 실적(평균치) 및 추세와 '23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7년에 7건을 목표로 설정 ※ '21년 10건, '22년 8건, '23년 8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3.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성과지표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 개념 : 연도별 방송사업 시장 규모 추이를 분석하여 방송시장 공정환경 조성 등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 측정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사대상 : 2022년 기준 방통위·과기부 등록 방송사업자(총 401개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인터넷 설문조사(각 방송사업자 제출자료 집계)
- 측정산식 : 2022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 **'23년 측정결과**

- '23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는 19조 7,579억원으로 전년(19조 4,016억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당초 목표치(20.4조원)에는 다소 미달
-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 원을 돌파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또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

〈 방송사업 매출 현황 〉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18조 118억원	19조 4,016억원	19조 7,579억원	3,563억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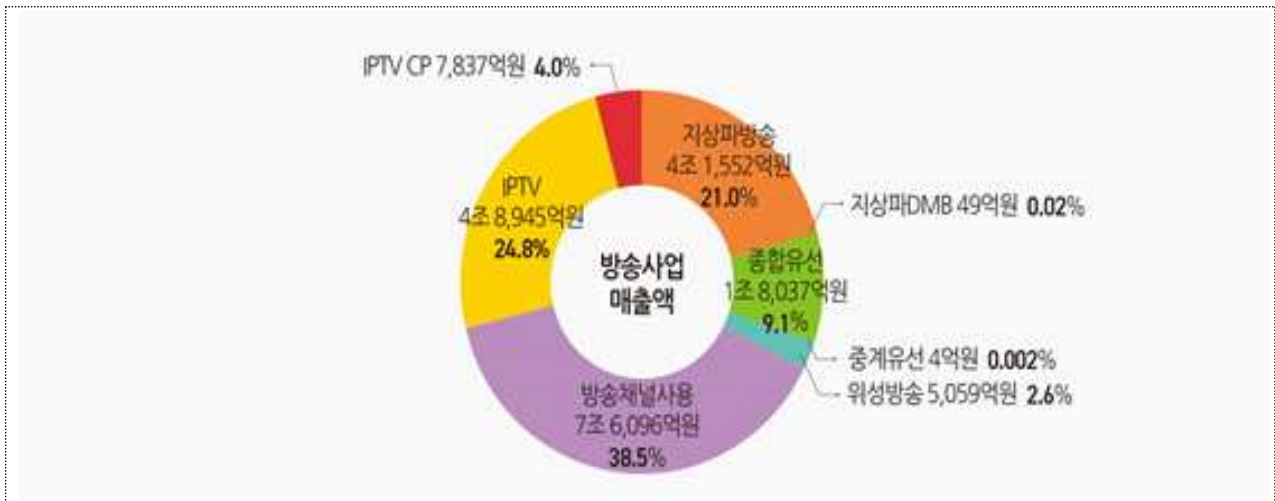
-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 변동 추이를 보면, 지상파방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조 1,552억 원, 지속적 성장세의 IPTV는 5.6% 증가하여 약 4조 8,945억 원 달성
- 반면 유료방송매체 간 경쟁심화 속 종합유선방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1조 8,037억 원, 위성방송은 2.9% 감소한 5,059억 원을 기록
- 중계유선과 지상파DMB도 이어지는 매출액 감소로 각각 전년 대비 30.9% 감소한 4억 원, 0.1% 감소한 49억 원의 매출을 기록
- IPTV CP는 21년 이례적인 OTT 매출 실적 기저효과로 인해 7.1% 감소한 7,837억 원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



- '22년도의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을 보면, 지상파 방송 (DMB 포함)의 점유율은 21.0%로 '21년 대비 0.4% 증가
- 종합유선방송의 점유율은 '13년 17.0%에서 '22년 9.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PTV는 출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3년 8.0%에서 '22년 24.8%로 점유율 확대

< '22년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



□ 성과분석

- 프로그램 제작·구매 활성화, 지상파의 OTT대상 콘텐츠 판매금액 증가 등 방송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63억원(1.8%) 증가 → 당초 계획한 목표의 97% 달성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총괄과)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상향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특히, 관계자 징계 등의 중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 41개 채널을 대상으로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총 4개 채널에 대해 과징금 총 6,900만원을 부과('23.3.28, 7.19)
 - '21회계연도 결산 국회에서 '방심위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 위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방심위에 부가('23.1월)

- (‘23 방송대상 개최)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추세를 고려하여 시상부문을 OTT·웹·앱 콘텐츠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우크라이나 전쟁·항일 여성운동가 등 우수 프로그램 15편을 선정·시상(‘23.11월)
- (방송의 품격 제고 등)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23.6월),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및 사례 교육 등(18회)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제작 지원 등을 통해 방송언어 순화 지원(연중)
 - 지상파, 종편PP 등 주요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18~22시)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93개 채널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을 12,290회 송출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수정 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의무절차 및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명시(가이드라인 개정안 보고, ‘23.12월)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해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확대(‘22년 1.5만대 → ‘23년 2만대)
 -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우선으로 무료 보급하되, 보급 확대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유료 보급(일부 자부담*)
 - * 맞춤형 TV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 기간(유상·무상 포함 최소 7년 A/S)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인 5만원 자부담비 발생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필수지정·고시의무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운영(59개사)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000여편) 및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콘텐츠(48편) 제작·보급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확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을 확대(종편PP 2개사 추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 이용 편의성 제고

※ ('22) KBS·MBC·SBS·EBS·JTBC·TV조선 → ('23) KBS·MBC·SBS·EBS·JTBC·TV조선·채널A·MBN

- (디지털 신기술 개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개발, 실수요자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7~12월) 등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지원) 수어영상의 위치·크기 조정 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고(9개사)

※ 채널(6개)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3개) : SKB·LG헬로비전·Skylife

-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구현) 장애인방송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보급 하고,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개최(7~9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 (이용자 권익보호)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한 이용자 대신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전체 유료방송사(18개사)로 확대 적용(3.23)

※ 언론보도 '민원 개선에 대한 우수성 언론 보도'('23.3.23., 방통위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7건

- (보험방송의 시청자정보 유용 여부 점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로 시청자 피해 예방

-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위 시정조치 의결(‘22.11.16) 과정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어 173개 방송사업자의 보험관련 방송 모니터링(3~4월)
- (방송분쟁 조정)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수급 및 대가 관련 분쟁 조정
 - 채널 편성 제외 관련 ‘시민방송-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간 분쟁 건에 대해 3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23.3.14) 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조정 및 합의 권고를 통해 분쟁 해결(연중)
- (금지행위 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IPTV사업자의 단독상품 가입 거부 및 결합상품 강요여부 점검(6~9월) 및 결과보고(10.19)
- (유료방송 채널평가 결과 통보현황 점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채널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5~7월)

④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방송사-외주사 간 계약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대상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상·하반기) 및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실시(7~12월, 문체부 공동)
 - 표준계약서 활용,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상생협의체 운영 등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으로 상생의 외주환경 조성에 기여
- * 점검결과 : (‘20) 91.3점 → (‘21) 95.7점 → (‘22) 96.7점
- (편성규제 개선) OTT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대·재편된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12월)

- 오락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제도 등 방송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분과회의 및 연구반 각 3회 운영(3월~10월)
 - *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협회) 등 참여
- (OTT 경쟁력 강화)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 포럼 개최(11.16.)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 (국제 OTT 포럼)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외 미디어 업계, 학계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개최
 - ※ '23.11.16.(목)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글로벌 정상급 기업인 넷플릭스, 홍콩 비유(Viu), 영국 더즌(DAZN), 프랑스 카날플뤼(Cannal+) 등 400여명 참석



- (해외 OTT 조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
 - * (시장조사)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국가 대상으로, 국가별 OTT 시장현황 및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을 조사(대만, UAE, 인도네시아, 일본)
 - ** (이용행태 조사) 해외진출이 고려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미디어 콘텐츠 선호도 등을 조사(멕시코, 브라질, 영국, 일본)
- (공적채널 평가방안 마련) 공적채널 경쟁력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해 현행 등록PP 평가를 확대하여 공적채널* 콘텐츠의 공적역할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안 마련(방통위 보고, 11월)
 - * 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 국악방송 등 10개 채널

⑤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법령상 7가지만 허용하는 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범주화하는 등 복잡하고 낡은 형식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추진('24.12월)

* 예외적인 금지사항 이외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광고를 허용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관련 사업자 등 간담회('23.6월, 9월)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10.25)을 통해 지원 대상사업자 범위, 지원규모, 산정방식 등을 마련,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방송광고 균형발전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매년 지원사업 신청 증가 및 예산 증액*, 지원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사업효과 입증

* 직전 3년 평균 대비 예산 9% 증액(직전 3년 평균 34억원→'23년 37.2억원), 지원 기업 10% 증가(직전 3년 평균 204사 → '23년 224사)

※ 그간 성과를 고려 '24년은 금년 대비 예산 40% 증액(15억원 증액, '23년 37.2억원 →'24년 52.2억원) 및 지원기업 확대(97개사 증가, '23년 224사 → '24년 321사) 예정

- 중기부 주관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됨(우수·보통·개선필요 3등급 평가)

*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15개 부처 8개 분야 169개 사업 대상 평가

- 청년친화기업, 고용 우수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업자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 지원정책을 반영
-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지원기업 발굴하여 우선 선발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4년 ~ 2028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27	'28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조원)	19.8	20.5	21.2	21.9	22.6	23.3	최근 3개년 '21~'23년 실적 (과년도 방송사업자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연평균 증가율 3.6% 적용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법 개정 추진 예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방송광고 마케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를 지원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원기업 성장 도모
- (편성규제 개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편성규제 개선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24년)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반기별) 및 방송분야 외주제작 실태조사(연중)
- (국내OTT 해외진출 지원) 국제 OTT 콘퍼런스 개최('24.11.) 및 해외 OTT 시장조사·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성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공영방송 ESG경영 방송평가 도입) 중앙지상파TV(KBS, EBS, MBC, SBS) 및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대상 ESG 경영 항목 관련 방송평가 실시('24년~)
- (공적채널 콘텐츠 공적역할 평가) 공적채널 콘텐츠 평가방안 마련('23년), 공적채널 시범평가 실시('24년~)
- (시각·청각장애이용 TV보급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TV 지원 확대('23년 20,000대 → '24년 32,000대)